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225호)

◦ 2001.11.14.

◦ 총무재무위원회

위 원 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10.18 서초구청장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01. 10.22

다. 상 정 일 자 : 2001. 11.14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116회 임시회 제2차총무재무위원회(1회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가. 제안이유

- 청결책임제를 구체화 하고 긴급재난시 폐기물처리의 민·관 협력방안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가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유지 책무를 강화함. (안 제4조)

- (2)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의1)
- (3)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자가 조치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의2)
- (4) 긴급재난시 자치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 적정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때 자치구간 지원 요청 또는 협력근거를 규정함. (안 제8조의1)
- (5) 구청장은 긴급재난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관할 구역안의 민간대행업자간 지원 또는 협력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안 제8조의2)

3. 검토결과

☐ 토지·건물 소유자등에 대한 청결유지 책무를 구체화 하고 긴급재난시 폐기물처리에 따른 다른 자치구 및 민간대행업자간 지원 또는 협력을 할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등의 청결유지 책무 명시(안 제4조)
- 청결유지 미이행자에게 1개월 범위내에 청결유지 조치토록 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의1 신설)
- 토지·건물 소유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5일 이내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조치명령을 다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후 비용을 징수할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의 2)
- 구청장은 폭우, 폭설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 여건변동, 대행업체 부도등으로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때 인근자치구에 대하여 인력 장비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요청 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음. (안 제8조의1 신설)
- 구청장은 폭우, 폭설등 특별한 사유발생시 민간 대행업체간 인력장비등 지원하도록 명할수 있도록 함. (안 제8조의2 신설)

□ 검토의견

- 조례안 제4조의1, 안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검토한바,
 -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2항에 “토지·건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제7조제3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이며,
 - 동법 제63조제3항 제1의2호에 동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구청장이 부과하게 되어 있고,
- 안 제4조의2제3항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내용을 인용하였음.
- 안 제8조의1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조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를 근거로 신설한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8조의2항은 지정구역외의 다른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대행업체에 이를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 장비등을 지원하도록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나, 의무부과 사항은 당사자간 계약이나 법령에 명시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의무부과 근거관계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 위 조례안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청결의무부과 및 긴급재난시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 서울시 폐관67510-1711(2001. 8)호로 자치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이 시달되었고, 2001. 9.10 ~ 2001. 9.30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의2제2항중 “토지·건물 소유자, 점유자 또는”을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으로 하고 안 제8조의1중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 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를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로 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의 내용과 같이 수정함이 좋을 듯 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금년 수해를 입었을 당시 주택, 아파트등에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처리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처리하였는지?

답) 2001년 7월15일 수해가 발생하였을 때 수해로 인한 쓰레기 발생처리비는 예상물량을 서울시에 보고하면 서울시에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를해서 서울에서 처리비용을 국비 또는 시비로 지원할 예정이므로 먼저 수해로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어 처리하고 후에 쓰레기 처리비용은 지원이 된바 있음.

질) 제출된 개정조례안 제8조 제1항의 내용 “ 구청장은 폭우, 폭설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 여건변동, 대행업체 부도등으로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때 인근자치구에 대하여 인력, 장비등의 지원을 요청할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 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에서 인근자치구의 범위는?

답) 인근자치구라 하면 통상적으로 구계 경계에 인접한 구이며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용산구가 있음.

질) 제출된 개정조례안 제8조의1은 인근자치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우리 구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협력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45를 살펴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답) 서울시 준칙안에 의해 각구에서 조례 개정을 하고 있으나 각구별로 피해상황의 상이성과 각구의 여건등을 감안한다면 제8조의1 다른 자구로부터 지원을 요청 받았을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동감.

질) 제8조의2 민간대행업체간 지원 또는 협력조항에서 대행업체의 각해당 구역중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때에는 여타 대행업체로 하여금 그장소를 처리할수 있도록 명하고 이에 응하도록한 조항은 당사자간 대행계약에도 불구하고 이조례를 만드는 것은 비민주적 조례라고 보아 조례가 개정된다면 이 내용을 포함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용의는?

답) 민간대행업체와의 위탁계약은 위탁자한테 주어진 의무와 책임, 권한까지도 위임할수도 있어 수탁자한테 상당한 명령권을 발동할수 있는 규정이 통례라고 판단되므로 내년도에 용역업체와 계약을 할 때에는 조례사항에 강제할수 있는 규정을 명시해서 재계약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 수정동의안 발의(발의자 : 권금택 의원)

안제4조의2 ②항중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을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의1중 “다른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를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의제성립)

6. 수정안의 요지 : 별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만장일치)

8. 소수의견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체계자구정리내용 : 없음